

2023. 3. 9.

□ 토론회 개요

- 목적 : 지역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산림경영계획 제도 도입, 순환형 산림경영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기후위기,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
- 주제 : 시군 산림계획제도 개선 및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
- 일시/장소 : '23. 3. 9.(목), 14:00 ~ 16:40 / 여의도 산림비전센터
- 참석자 : 61명[미래산림특위 10(정은조 위원장 외 9), 산림청(9), 지자체(15), 학계 및 전문가(9), 기타(10), 농특위 사무국(사무부국장 외 7)]

□ 토론회 주요 내용

- 개회사 : 미래산림특위 정은조위원장
- 축 사 : 경상북도 의성군 김주수 군수,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최무열 회장
- (발제 1) 기후·경제·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(구자춘위원)
(발제 2) 시군 산림계획을 통한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(이강오위원)
- 토론결과(요약) * 별첨자료 참고
 - : 최병암 좌장 외 9명(임업·농업·환경 전문가, 임업단체, 산림담당과장 등)
 - (임업전문가) 현행 산림기본법 체계에 산림경영 이행, 모니터링 체계 등을 마련하고,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격상, 추진실적 평가, 예산의 차등 지원 등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. 목재이용법,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등과 산림계획제도를 연계하고, 지역 목재 이용지침 마련, 목재의 수공급 매칭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 필요
 - (농업전문가) 농업분야 농발계획 수립 시 커뮤니티 계획의 필요성 확인, 분리영역이 아니라 통합된 유기체적 관점의 계획 수립, 법정계획과 함께 사전준비 과정이 더욱 중요함. 지자체에 시범사업으로 작은규모의 사업부터 추진해 볼 필요 있음.
 - (임업단체) 임업인 입장에서는 산림계획제도 신규 도입은 규제로 인식 매우 회의적임. 임업인의 현실을 먼저 개선(시범 사업화 및 컨설팅강화 등이)하려는 인식 절실함. 임업직불금 도입으로 산림경영계획 수립 보조금이 축소되어 경영계획 수립 비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 있음. 시군계획 도입은 산주의 경영계획 수립을 더 어렵게 만들 것

- (환경전문가) 산림경영과 환경, 농업 등은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커서 매우 어려운 과제로 쉽게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양하고, 동해안 산불복원(자연복원과 인공복원 병행 추진)과 같이 시범적 운영사례 만들어내고, 변형된 경영모델을 사업·개념화 하는 과정 필요
- (산림행정가) 현재 법정계획도 실행력을 담보 못하는 현실에 비취 산림계획제도 도입 신중히 접근, 목재와 비목재를 고려한 모델 필요. 벌기령은 지역에서 탄력적 운영 필요
- (기타의견) 수요자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도시민이 최대 산림이용 수요자축이고, 정부도 공익 수혜자로 비용지불 의사 있어야 함

□ 기타사항

- 「시군산림계획제도 개선」 정책토론회 논의된 내용 정리하여 시군에 새로운 규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 보완해 낼 예정임

□ 사진첩

기념촬영(미래산림특위 및 토론자 등 내빈)	토론회 참석자		
개회 및 인삿말씀	의성군수 축사	임업인대표 축사	지정토론

붙임 회의결과 1부. 끝.